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

Youth Debt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박수민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가계부채 급증과 더불어 특히 청년 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채 통계와 조사가 선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데이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 없는 임시적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명확한 조사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 세대 내 경제적 문제는 성별, 주거, 일자리, 건강, 가족,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맞춤형 개별 지원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부채 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은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 지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가계부채,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증되고 있는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 연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채 악성화, 불

법 금융 피해 노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이후 ‘다중채무 청년 부채 경감 재기 기반 마련’(금융위원회, 2021)안이 발표됐다. 해당 내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임시적인 채무 조정 조치일 뿐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

한 진단 및 분석 없는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는 단순히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첫 출발에서 발생한 대출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유보하게 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발생시킨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선택하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소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또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아래 개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들은 배제되고 인간관계와 최저생활, 자존감, 미래의 희망 등(광주광역시, 2017)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들은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청년 부채는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가족 등)가 경제적 지표들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는 부채라는 금융 문제이지만 사실상 청년 세대의 삶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의 금융적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부채 현실을 진단하고 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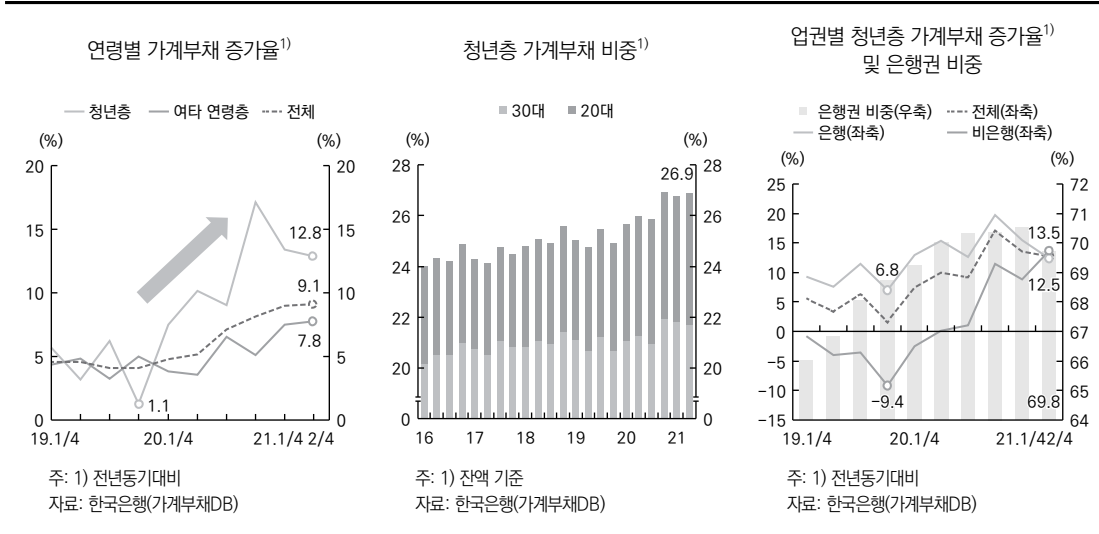
2. 청년 부채 현실 진단 및 정책 평가

가. 청년 부채 현실 진단

우선, 현재 청년 부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가 없는 관계로 확인 가능한 몇 개의 데이터를 통해 상황을 예측해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전제로 살펴보려 한다. 2021년 9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점검한 금융안정 상황(한국은행, 2021)이 발표됐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증가세와 더불어 청년층(20대 및 30대)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2021년 2분기 12.8%)이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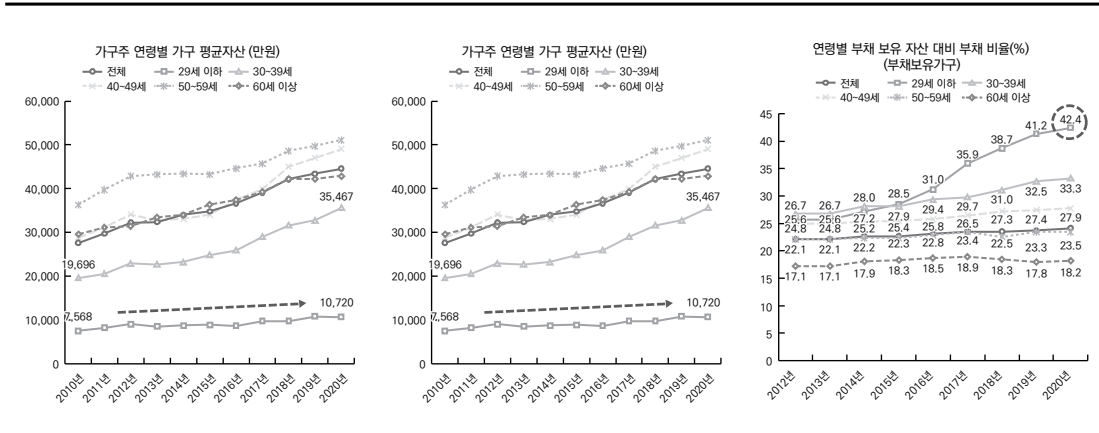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청년 세대의 부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볼 수 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20대 가구주의 부채 상황이다. 29세 이하 가구주는 2020년 가계 부채가 평균 3,479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7배 증가했다(그림 2). 30대 가구주도 2012년 대비 2020년에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 보유 가구)도 29세 이하 연령대는 42.4%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연령별 가계 신용부채 대출 목적을 보면 20대 가구주는 44.9%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이 목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주거 목적이 중심인 것을

그림 1.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자료: 한국은행. (2021).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상황. p. 32. 참고1.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보도자료.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가계부채 평균



자료: 한영섭(2021b). 청년 부채 정책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한영섭 재가공함.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청년의 가계대출이 주거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다(한영섭, 2021a).

청년 부채는 청년 세대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부채 외에도 통신 요금, 건강보험료 연체, 학

표 1.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금융복지지원사업) 비재무적 상황 분석

연도	신용 외 문제										
	불법 금융피해	통신 요금연체	건강 보험연체	도박/ 중독	심리 호소	인지 능력	일자리	노동 문제	주거	단절	비고
2018	29	-	-	-	-	11	-	9	60	-	건
	12	-	-	-	-	4.4	-	3.6	24.2	-	%
2019	27	-	11	12	45	9	41	4	36	-	건
	10.8	-	4.4	4.8	18	4	16.4	1.6	14.4	-	%
2020	43	63	38	23	59	17	106	10	63	-	건
	11.4	17	10	6	16	5	28	3	17	-	%
2021.10	64	109	40	25	58	23	100	7	41	25	건
	17	29	11	7	15	6	26	2	11	6.5	%

자료: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2021). 청년부채현실과 진단토론회 사례로본 청년의 삶 자료집.

1) 광주청년드림은행 1:1 상담 비재무적 상황 분석 내용임.

2) 광주청년드림은행은 광주광역시 만19세~만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복지 지원사업임.(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자금 대출 연체 등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의 기관별 데이터가 있으나 개별적 지표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의 연계성을 보여 주는 의미에서 광주광역시 금융복지지원사업 상담 분석 내용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광주청년드림은행 청년 비재무적 상황 분석 결과(표 1)를 보면, 통신 요금 연체가 29%, 건강보험료 연체가 11%(2021년 10월 기준)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여 준다. 사회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휴대전화의 사용이 중단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는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기본 생활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청년 부채 문제에 포함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불법 금융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내구제대출, 소액결제깡,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 금융 피해에 노출된 청년들이 내담자 중 10%로, 청년 세대를 둘러싼 금융 환경 또한 안전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할부 또는 렌탈해 물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전 지역 당일 출장, 무방문 무서류, 신용불량 통신 미납 OK 등 쉽고 빠르게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생계비로 소액이 필요한 청년들이 변종 금융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거액의 부채까지 짊어지게 된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서 내구제대출 심각성에 대한 보도(KBS 시사직격, 2022. 1. 28.)를 한 이후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광주 지역에 문의를 하는 상황으로,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상담 과정 중 내구제대출 문제를 처음으로 확인했던 한 청년의 사례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이 청년은 생활비 100만 원이

필요해 온라인 검색을 하던 중 한 작업 브로커를 알게 됐다. 브로커는 SNS를 통해 휴대전화, 정수기, 다단계 회사 물건 구입, 안마의자 구입까지 이 청년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 회사가 사기죄로 작업 브로커를 고소했다. 이 청년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또 온라인상에 문의하던 중 추가 대출 사기를 당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상황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와 혼자 생활하던 중 발생한 문제였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청년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휴대전화 유심칩이 브로커에게 넘어간 것도 문제였지만 다단계 회사에서 구입한 물건과 가전제품이 타인에게 재판매되어 계약 해지조차 쉽지 않았다. 전체 부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문제와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해지로 연락이 두절됐다. 내구제대출의 문제를 알게 된 계기였다. 2017년 이 사례를 확인한 후 전국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범죄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는 추세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집계 혹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재테크 등 투기 열풍을 청년 부채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일부 제기된다. 부채의 양적인 측면에서 청년 부채의 요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진단은 청년 세대 내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일차원

적인 접근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마주한 청년 대다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소득 감소, 가족의 문제, 건강 문제, 주거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생계형 부채가 발생한 경우였다. 세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생계형 부채의 진짜 문제는 청년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 정책 평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해 발표한 ‘다중채무 청년 부채 경감 재기 기반 마련’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대출 포함)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 원금 감면으로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 2021).

이 정책은 청년 다중채무에 대한 진단 오류와 기관의 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부채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현 정책 시행 이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재단을 통해, 금융권 부

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워크아웃)를 통해 별도 약정을 맺고 각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만으로 부채를 통합해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 연체된 채권만 포함되는 것도 이 정책의 한계다. 청년 부채 급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표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소극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거나 연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되지만 않았을 뿐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에 놓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안정적인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일 확률이 높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온갖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드러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조치이고,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청년 부채 현실 진단에서 청년 세대 내의 다양한 차이에 따라 부채가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워크아웃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사전 조정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부업체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선택하기에는 청년이 안정적인 소득이 낮거나 없는 상황, 취업 준비 등의 문제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워크아웃과 같은 채무조정제도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연체 채권만 포함된다면 것은 결국 기관별 별도 상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다중채무 부담이 완화될 수 없는 조치이다.

또한 이 정책의 한계와 문제는 채무조정제도까지 가기 전, 연체 이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다. 다중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청년 세대가 겪는 주거, 교육, 생활, 구직의 어려움을 개인의 대출로 해결하도록 하고 사후 대책 차원의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치는 청년을 위한 것인가, 대출기관을 위한 조치인가. 청년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 과제(국무조정실, 2021)로 발표된 것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0년 장기 상환 역시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교육비, 주거비 대출로 끝나지 않는 빚 속에서 허덕이는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보인다. 개인회생은 특히 청년,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 기간을 계속 단축하는 흐름과도 역행한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이자 지원 사업

과 신용유의자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어 온 가운데 해당 정책들의 지속 여부 혹은 개선을 통한 종합계획 없이 발표된 상황만 보더라도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적보다는 해당 기관의 안정적인 부채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라도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 지자체 차제 예산으로 이자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을 해 온 곳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및 확장을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정책 및 대응 방향

가. 단기 계획: 청년 부채 조사 및 악성화된 부채 해소

1) 청년 부채 조사 및 발굴 필요

어떠한 문제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년 부채는 그 전제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기관 합동)가 마지막이었고 지자체별로 의지에 따라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현재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사 등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1단계이고, 부족한 내용은 매년 실태조사 및 사고 접수 지원 등을 통해 발굴

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의 청년정책 기관들과 연계해 인터뷰나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 금융 피해 등을 발굴하기 위한 통로를 열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 부채에 대한 조사는 현재 부채 발생 원인에 따른 개별적 지원 방식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학자금 부채, 창업자금,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등으로 분리되어 총괄적인 부채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 투여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다. 청년의 문제가 하나의 부채 혹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장기 연체 채권, 악성화 부채 우선 해결

청년 부채는 주거, 일자리, 건강, 교육, 지역, 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물로서 일부 문제만 해결해서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째가 이미 악성화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다. 청년 부채는 이들의 사회 진입과 이행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장기 연체, 악성화된 부채는 오히려 탕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나, 해당 채권들이 원금의 1~10%

수준의 헐값에 대부업체 등에 판매되어 채무자들이 악랄한 추심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가. 이들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다만 악성화된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확인하고 소각되지 않은 부채 혹은 다른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가 병행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금융·복지 지원 정책 조정 및 재설계

이 문제는 현재 청년 부채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단기간에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기에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이 필요한 대상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과 같은 금융정책이 제공됨으로써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금융의 문제만 남는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금융과 복지 지원 대상층을 정책 진입 과정에서 확인해 적합한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순히 청년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금융정책, 교육정책, 취업 지원 정책, 서민금융 지원 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이 모두 청년 부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는

정책의 대상 여부를 떠나서 유입 청년의 대출 필요 욕구를 확인하고 이후 해당 목적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 잘 활용되었는지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사후 관리 지원까지 함께 작동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 관리·감독의 시각이 아닌 청년의 입장에서 금융적 지원이 필요했던 요인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 혹은 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4) 청년 경제 문제 해소 및 자립 지원 전문 기관 설립 필요

청년의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학생, 구직자, 니트 상태, 창업,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처한 경제적·비재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안내와 연계가 필요하다.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제도 연계와 해결까지 1년 혹은 2~3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에 채무조정제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추가 대출에 대한 고민, 가족의 문제 등 후속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지지망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기관은 단순히 연계 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금융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 정부 햇살론 빙자 사기 사례 혹은 불법 금융 사례, 정책의 사각지

대를 가장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당사자 지원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요인 해소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청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과 같은 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나. 중장기 계획: 청년 부채 발생 요인 해결과 금융 생태계 개선 필요

1) 청년 부채 발생 요인 해소

현재 청년 부채 문제의 핵심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 구직비용, 생활비 등으로 인한 청년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전환 없이는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교육과 주거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접근 역시 청년 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역할 변경, 대학 무상 교육 등의 논의가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 부채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혹은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위한 관리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금융 생태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구축

최근 핀테크 시장의 확장, 규제 완화 등으로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금융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불법 사채를 이용한 청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이 불법 행위에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업자들은 이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ATM 현금 찾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흔적 없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의 입출금 기록 외에 사채업자의 계좌 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대면하지 않아 인상착의 등을 알 수 없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해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대안 신용등급 제도 역시 민간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신용등급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다각적인 고민과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예로 한국장학재단과 스타트업 회사가 협업해 만든 대출 상환 앱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장 어린 대출 고객을 확보하고 대학생 신용평가등급을 만들겠다는 기업의 목표가 과연 공공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로 가질 수 있는 혹은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허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마이홈택스에 탑재하면 혹은 했어야 하는 기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마주하면서 더 편리하고 빠른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조 아래 금융이 갖는 공공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최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미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를 살펴볼 수도 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요인들로 꼽히는 신용카드 사태,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가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때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4. 나가며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들로 정의된다. 청년 부채는 이 세대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드러난 숫자만으로는 청년 부채 문제의 본질을 알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성별, 교육, 지역, 일자리, 가족, 건강 등 세대 내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개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고민하는 두 명의 청년이 있다고 할 때, 청년 개인의 부채 상환 계획 수립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생활비까지 책임

져야 하는 청년의 부채 해결책은 전혀 다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인 사기,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금융 사기와 연관된 부채 문제 역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주최로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토론회를 4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생각이 명료해지기보다는 고민이 더 깊어졌다.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복잡하고 해결 방안은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들은 임시적 조치일 뿐 결국 본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부채에 대한, 또 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청년 부채 해소 정책이 새롭거나 획기적인 정책은 아니다. 한순간에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발생한 혹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부채는 청년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발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와 사회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 아닌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다. 부디 청년 부채 문

제 해소를 넘어 빛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罫

한영섭. (2021b.11.25.). 청년 부채 정책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자료집. <http://gjymh.com/>에서 2022.2.14. 인출.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17). 광주지역 청년부채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 한국은행. (2021.9.2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1.11.22.).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1.11.30.). 청년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 과제 발표. 보도자료.
- 광주청년드림은행. (2021.12.27.). 2021 광주청년드림은행 금융복지연구.
- 이종구. (2021.12.29.).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 KBS시사직격. (2022.01.28.).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대출.
- 한국은행. (2021.9.2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상황. p. 32. 참고1.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보도자료. <http://www.fsc.go.kr:8300/v/pRNSbFyIEU6>에서 2022.2.14. 인출.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2021.11.11.). 청년 부채 현실과 진단 토론회. 사례로 본 청년의 삶.자료집. <http://gjymh.com/>에서 2022.02.14. 인출.
- 한영섭. (2021a.11.11.). 청년 부채 현실과 진단 토론회.자료집. <http://gjymh.com/>에서 2022.2.14 인출.

Youth Debt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Park Sumin

(Gwangju Youth Money Habit Training Center)

In addition to the surge in household debt, various indicators have been identified that youth debt, in particular, is increasing steeply.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seriousness and announced measur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easures in the making are comprehensive enough. Any workable set of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statistics and surveys on youth debt, but related data integration has not been carried out at this time. Temporary measures without accurate diagnosis and analysis can make matters worse, so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based on sound evidence. In particular, economic problems within the youth generation can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gender, housing, jobs, health, family, region, and education level,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design customized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an be ensured when individual support is combined with measures to reduce factors that generate debt.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a long-term and continuous stance in that solving the youth debt problem is connected to social structural changes and points of change in perception of finance beyond the problems of individual youth.